



[갤럭시Z플립]
한손에 쏙
컴팩트 사이즈
30분 새 완판
02



Economy

코스피 2243.59 (0.00)	코스닥 688.91 (0.00)
금리 (미국 3년) 1.33 (+0.06)	환율 (원-달러) 1183.00 (+0.20) (14일)

아무도 책임 안지는 ‘라임 사기극’ 소송에 내몰린 고객-증권-판매사

“라임-신한금투 ‘펀드조작’ 금감원, 檢에 사기·배임 통보 피해 투자자 소송 봇물 예상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른바 ‘라임 사태’로 2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공중분해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라임과 공모해 펀드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등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고, 총수익스와프(TRS)를 둘러싼 판매사와 증권사 간 분쟁도 격화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를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 판매’로 규정, 법무법인과 함께 소

송에 나선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 보상까지는 까마득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과 판매사를 고소한 투자자는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34명,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3명 등 총 37명이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투자자는 현재까지 2명으로 알려졌다.

한누리는 현재까지 고소와 소송 관련 상담을 의뢰한 투자자가 150여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소인 수가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임 사태, 증권사와 공모?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과 신한금투를 사기 및 배임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지난

2018년 6월 ‘플루토 TF 펀드’ (무역금융 펀드) 투자처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일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된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과 청산 절차 개시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하고도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 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형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정상 펀드에 부실을 전가하고 수익률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IIG수탁사가 보낸

메일 내용 확인을 위해 IIG를 방문했으나 당시 IIG운용역의 사망과 IIG책임자의 회피 등으로 IIG펀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IIG펀드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실은 2019년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 공식 발표 이후에야 알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신증권은 반포자산관리(WM)지점 장 모 전 지점장의 일탈이 문제가 됐다. 라임 펀드 조성 단계부터 본인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다. 실제 해당 지점에서만 400억원이 넘는 라임 펀드가 판매됐다.

(3면에 계속) /송수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社告



2002년 월드컵의 합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에 이어 2018년 3월 유가지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를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는 매체 다변화 시대를 적극 주도하기 위해 온라인과 지면의 동시발행이란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기사, 인공지능(AI) 도입 등 개방형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메트로는 독자와 함께 하며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18년 역사의 메트로와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수습기자 채용 안내 -

- 모집부문 : 취재(뉴메트로 공채 6기 수습기자)
- 모집내역 : ①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취재 역량평가 ▲3차 : 면접(블라인드 방식)
- ② 모집인원 : 0명
- ③ 응시자격 : 대학 이상 졸업자(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공통사항>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자 우대
-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본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장(지원서와 수험표 부착)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① 기간 : 2020년 2월 4일(화) ~ 2020년 2월 19일(수) ②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2월 19일 도착분)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18(옥인동) <뉴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앞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월 21일(금) 본지 웹 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시험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로 문의 (전화 02-721-9826)



고공의 늦겨울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광화문 경복궁이 내린 눈으로 하얗게 변해 있다. /연합뉴스

평균근속 11년8개월, 임원 1000명 중 8명 쫓

(4만명 중 332명)

④ 데이터로 보는 10대 기업

⑥ LG전자 (下)

근속연수 매년 꾸준히 늘어나 기간제 근로자 1.43%, 581명

2020년은 LG전자의 세대교체가 시점에 오르는 해다. 43년간 몸담으며 ‘세탁기 장인’이란 별명과 함께 ‘가전 신화’를 일궈낸 조성진 부회장은 지난해 말 은퇴했다. 대신 권봉석 LG전자 사장이 새 최고경영자(CEO)로 부임했다.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한 것은 2014년 오너가 일원 구분준 대표(현 LG그룹 고문) 체제 이후 6년만이다. 40대 젊은 총수 구광모 LG그룹 회장(41)이 50대 CEO 권 사장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적자에서 헤어나고 있지 못하는 스마트폰 사업을 회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근속연수 11년 8개월... 계약직 1.4%

16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LG전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1년 8개월로 국내 전자 업계에서 가장 길다. 다른 업종 대기업과 비교해 봐도 안정적인 편에 속한다. 남직원인 13년 6개월로 여직원(10년)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일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HE(휴먼터레인먼트)부문이 13년 8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B2B 사업을 맡은 BS부문이 10년으로 제일 짧았다.

근속연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8.1년에 불과하던

여직원 근속연수는 3년 만에 2년 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남직원 근속연수 역시 2년 늘었다.

기간제 근로자는 총 581명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LG전자 전체 근로자 4만554명의 1.43% 수준이다. 2018년 말 전체 종업원 3만7698명 중 552(1.46%)명이었던 것과 큰 변화 없었다.

총임원수는 332명이다. 등기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감사위원회 위원이 3명, 미등기임원이 32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직원(4만590명)의 0.8% 수준이다. 등기이사 2명은 지난해 3분기까지 인당 평균 22억7300만원을 수령했다. 2018년 평균 지급액인 22억93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3분기 만에

받았다. 2017년에는 인당 평균 18억3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신규인사에서 30대 임원이 3명이나 발탁돼 눈길을 끌었다. 그중 가장 높은 관심이 향했던 이는 조셉 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컴퓨터공학부 교수. 과거 33세의 젊은 나이로 USC 컴퓨터공학부 교수 자리를 맡아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외부 인사를 곧바로 임원 자리에 앉힌 것은 인공지능(AI) 기술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구광모 회장의 의지로 읽힌다. LG전자는 북미·러시아·캐나다 등 연구 개발 거점을 두고 AI 사업을 추진 중이다.

(3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

ESS 화재 진실공방 정부 주먹구구식 조사 의혹

5사 제작 종합시스템에 ‘배터리 책임론’만 강조

국내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던 ESS화재가 ‘배터리 이상’으로 결론났지만 부실조사가 아니었는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2차 ESS화재 사고 조사단은 1차 조사 결과를 뒤엎고 ‘배터리 이상’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와 기업 간 ‘진실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취재 결과, 전기 안전공사 측은 해외 화재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내용 공개하기 보다 숨기는데 급급한 모습이며, 2차 조사단은 해외 사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배터리 화재’를 제조사의 원인으로 결론

지었다. 국내 ESS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결론내야 할 정부가 외려 부실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차 ESS 화재 사고 조사단은 지난 6일 ‘배터리 이상’을 화재의 원인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그러나 ESS(에너지저장시스템)는 배터리 외 전력변환장치(PCS) 등 부품업체와 운영시스템(EMS), 관리시스템(BMS), 설치·시공업체 등 4~5개 업체가 함께 만드는 종합시스템인데도 배터리에만 집중해 책임소재를 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 및 관리 등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는데 ‘배터리 책임론’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6면에 계속) /김수지 기자 sjkim2935@